

정부 '日 독도 영유권 명기' 강력 대응

“영토주권 훼손 행위 ... 절대 용납 못해”

외교부·국토부·교과부 등 유관부처 총동원

한일관계 경색 감수 ... “모든 책임 日에 있다”

청와대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

문제는 우리의 영토 주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초기에 미흡하게 대처했다...

청와대는 일본측의 발표가 있자마자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이 새 정부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일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독도는 분명한 한국 영토로, 결코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향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일본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가 즉각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키로 한 것이나 9월로 예정된 한중일 3자 정상회담과 관련, “상황을 봐가며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국간 약속을 뒤집는 행위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우리는 그간 일본측에 단호한 대응방향을 밝혀왔고, 그에 따라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뒤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관계자는 “양국이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후퇴하느냐는 전적으로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박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는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을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측의 의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기초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은 앞서 지난 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했지 말 것을 일본 정부에 공개 촉구했고,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던 9일에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만나 우리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지. A timeline and map showing historical claims and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on Dokdo. It includes dates from 1905 to 2008 and various international court rulings.

쿠릴열도와 같이 취급 ... 반환 요구 내포

일 독도 영유권 주장 속셈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명기하는 등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과 노림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끝내 외면한 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를 공표했다.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얼핏 보면 한국측을 크게 배려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서 반환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현재 러시아와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측 쿠릴열도)의 4개섬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해설서의 표현을 크게 완화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지난 5월 해설서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한국측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자 총리실과 문부과학성, 외무성 등 관계부처간 조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직

접적인 영유권 주장을 뺐 표현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측을 배려한 표현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를 실효지배하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 자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해설서에 그동안 언급이 없던 독도에 관한 영유권 언급이 포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주권 침해에 당한 셈이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일본측의 움직임에 대한 강한 항의와 함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두차레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을 만나 똑같은 요구를 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모든 채널도 풀가동됐다. /연합뉴스

“日 독도 영유권 명기는 주권침해”

정치권·시민·교원단체 한목소리 성토

정치권과 시민단체, 교원단체들은 14일 독도의 영유권 관련 사항이 담긴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개를 앞두고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데 주력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의 지도명기 방침을 공지했다는 교도통신 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측 해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

이 독도 문제 등을 장기적 차원에서 기획하는 데 이명박 정부는 순진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측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로부터 독도의 지도표기 문제를 통보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 데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는 주권침해”라고 강력 항의했다.

한편 광주 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14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日 해설서 독도 관련 언급 전문(요약)

“(중략) 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나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광주기아조합원은 광주가 아껴놓은 마지막 보물입니다. A large advertisement for Kia's 'GIA' (기아) brand, featuring a blue and yellow color scheme and text promoting the brand's commitment to customers.